

1. gaps 집단현상설을 을은 국가현상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현상설>
- 정치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와 관련된 국가 고유의 활동 (→국가 고유의 현상)
- 정치를 국가의 권력 활동(입법, 행정, 사법)에만 한정 → 정치권력 = 국가 권력
- 정치의 주체는 소수의 정치 담당자들(엘리트주의)
-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인 강제력은 오직 국가만이 보유 (정치란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한 통치기구의 권력 활동)
(단점)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의 정치 현상 설명 어려움, 국가가 아닌 다른 집단의 연구를 소홀히 하기 쉬움,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 정치 현상 설명 어려움

<집단현상설>
- 국가만이 가지는 특유한 현상(x) 권력 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o)
- 모든 사회 집단 활동에서 나타나는 현상 (→정치의 주체를 포괄적으로 인식)
- 기업 내부의 갈등 조정을 위한 노사 협의회나 학생들의 학생회 활동
- 국가도 다른 일반 집단과 다를 바가 없으며 여러 집단 중 하나일 뿐(→다원주의) (※ 집단현상설에서도 국가의 활동도 정치의 일부분 → 국회의원입법활동도 정치)
(단점) 다른 사회단체와 구별되는 국가의 특수성 및 중요성 무시 인간의 사회 활동도 실질적으로는 국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 간과 정치에 대한 개념의 불명확성

답은 5번입니다.

2. A는 의원내각제를 B는 대통령제에 해당 되죠 답은 3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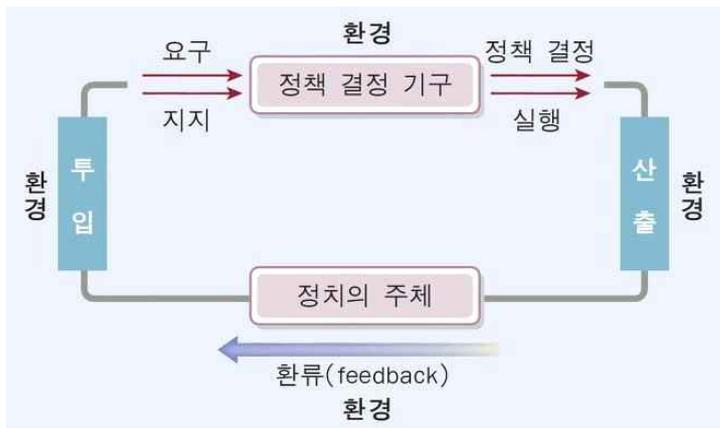
- ①의원내각제는 의원이 각료 겸직이 가능하죠
- ② 의회해산권은 의원내각제 특성입니다.
- ③ 대통령이 국가원수를 겸하는 것은 대통령제입니다.
- ④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제 내용이죠
- ⑤ 국회의 해임건의권은 의원내각제 특성입니다.

3. gaps 형식적 법치주의 을은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아래 설명에 의하면 답은 4번입니다.

형식적 법치주의 Rule by law	법에 의한 지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제정된 명확한 법에 의해 통치 (형식적 합법성) if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된 법치 then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x 법의 목적이나 내용과 무관하게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 외형상으로 통치의 합법성을 구비 but 내용적인 면에서 정당성 결여 가능 다수당의 횡포나 통치권 강화 독재정치 옹호수단으로 악용 (히틀러 수권법) “악법도 법이다.”
실질적 법치주의 Rule of law	민주주의적 가치와 정의의 요청을 충족하는 법의 지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 + 목적/내용도 실질적 평등에 부합 要 형식적 합법성 + 실질적 정당성 (and 관계) 국가의 모든 통치행위가 실질적 정의 부합 要 법의 지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 진정한 목적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근본 규범” 例) 위헌법률심판제도 (입헌주의의 실현 : 헌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공통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 방지 (인치주의 반대: 통치자도 법의 구속 要)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 인정” 절법한 절차에 따른 법의 제정 필요 (형식적 합법성) “모든 국가권력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답은 4번이죠

4. 정치과정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투입)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 등 정치참여 주체들이 정책요구, 정부 지지, 불만표시, 반대 등
 (정책결정기구) 입법부(입법작용), 행정부 (정책 입안 및 시행)
 (산출) 입법부, 행정부가 어떤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결과물 (→ 법률, 정책)
 (환류) 산출된 정책을 평가하고 조정하여 새로운 정책을 요구하는 작용 (→선거)
 (환경) 경제, 사회, 문화, 생태 체계 등 정치 외적인 요소 통칭

5. 지방자치제도 설명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주민참여제도 (지방자치에관한법률)

가. 주민투표권

제14조(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나. 조례 제정 및 개정 폐지 청구권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시·군 및 자치구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정해진 요건을 구비, 지자체장에게 조례 제/개정/폐지 청구

다. 주민소환청구/투표권

제20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동법의 위임에 의해 주민소환법에서는 위법부당행위 or 직무를 태만한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음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의 수직적 권력분립이죠^^

6. 사안은 복지국가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죠

7. 값은 사회권, 을은 청구권, 병은 자유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죠

8. 국회의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은 1번이죠

- ① 헌법 98조 3항에 따라 감사원장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죠
- ② 국정조사는 국정감사와 달리 부정기적입니다.
- ③ 헌법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요구는 없습니다.
- ④ 일반법률제개정안은 국민 투표절차가 없습니다.
- ⑤ 사안은 국정감시 통제 기능이죠

9. A는 항소법원, B는 대법원, C는 헌재입니다.

- ① 상고심은 대법원이죠
- ② 국회의원 선거 효력 소송은 법원 관할입니다.
- ③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죠
- ④ 헌법소원 청구자격은 일반 국민입니다.
- ⑤ 법관탄핵소추는 국회권한입니다.

10. A는 시민단체, B는 이익집단, C는 정당이죠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정권 창출(권력 획득)	○	×	×
공공이익 추구	○	×	○
정치적 책임	○ (by 선거)	×	×
활동 분야	모든 영역	특수 이익 영역	사회 공공선의 영역
국회와 정부 매개 기능	○	×	×
대의 정치의 한계 보완	×	○	○
공통점	투입과정에서 비공식적 참여를 통하여 영향력 행사 → 정부 정책의 산출과정에 영향력 행사 정치적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증진시키는 정치사회화 기능		

정답은 3번입니다.

11. 해당내용은 계약공정의 원칙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12. 사안에서 갑은 미성년자이죠

- 1) 갑은 독자적 취소가능합니다.
- 2) 처분이 허락된 재산은 유효합니다.
- 3) 미성년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에게 확답요구를 해야 합니다.
- 4) 사술인 경우 취소 불가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3. 친양자와 양자의 구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분	일반입양	친양자 입양 (양자와 친생자 차별가능성 배제) (아동복리를 고려한 강력한 입양)
성립요건	- 당사자간 입양의 합의 - 성인도 입양 대상 가능 (다만 존속이나 연장자 x)	- 가정법원에 입양 청구 - 미성년자만 가능
친권행사	양부모	
피입양자 성과 본	친생부모	양부모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종료
효력	- 입양 시점부터 혼인중의 자 -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친권을 제외하고 그대로 유지 (친족, 상속, 부양관계, 면접교섭권 유지)	- 재판 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 -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 종료 (친족, 상속, 면접 교섭권 종료)
	을과 병이 갑을 (친)양자 입양 후 이혼, 병이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게 된 경우에도 을과 갑의 친자 관계는 그대로 유지(∵ 혼인중의 자)	
효력 발생 시기	신고 제878조(입양의 성립)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 이 생긴다	재판확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가 출제 예상된다고 했었는데 6평에 나와버리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14. 특수불법행위 문제입니다.

- ㄱ)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일반불법행위 성립을 전제로 합니다.
- ㄴ) 책임능력이 없다면 불법행위는 불성립입니다.
- ㄷ) 특수불법행위가 아닌 일반불법행위 여부가 문제되겠죠
- ㄹ) 감독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답은 5번이겠죠

15. 근로자관계 문제입니다.

- 1) 노동조합도 부당노동행위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구제신청과 별도로 민사소송인 해고무효확인소송 제기가 가능하죠
- 3) 사안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인정, 부당노동행위 불인정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도 인정한 것이겠죠
- 4)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인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16. 형사문제입니다.

- 1) 고소장은 피해당사자가 제기하는 것이죠 제 3자가 제시하는 것은 고발장입니다.
- 2) 긴급체포 등의 경우에는 사후 영장도 허용됩니다.
- 3) 변호인 조력권도 당연히 인정되죠
- 4)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 심문 절차를 반드시 거칩니다.

정답은 5번이죠

17. 사안은 죄형법정주의중에서 적정성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18. 조약 및 법입니다.

- 1) 출입국 관리법은 법무부에서 강제권한을 지닙니다.
- 2) 국내법은 포괄적 국제적 효력이 없겠죠
- 3) 조약 체결권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 4)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 5)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19. A는 안전보장이사회, B는 국제사법재판소입니다.

안전보장이사회	<p>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는 실질적 의결기구</p> <p>국제분쟁에 대해 조정방법을 권고하고, 국제안전과 관련된 이슈인 경제적 · 군사적 제재의결</p> <p>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제재</p> <p>구성 : 5개 상임이사국(미/영/프/러/중)과 10개 비상임이사국 (상임 이사국은 정해져 있는 사안이며 표결의 대상이 아님)</p> <p>의결 : 15개국 중 9개국 이상 찬성 but 상임이사국 중 1개국 거부 시 부결 (상임이사국의 거부권)</p>
국제 사법 재판소	<p>UN의 사법기관으로, 국적이 다른 15명의 재판관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으로 구성</p> <p>소송물은 국가 간의 분쟁 즉 국가 간의 분쟁(개인의 형사책임 x)에 대해 국제법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국제연합의 사법기관</p> <p>비회원국도 재판 청구 가능 but 당사국 쌍방의 신청에 의해 재판 진행 -일방 당사국의 신청만으로 관할 형성 x (→ 임의적관할권o 강제적관할권x)</p> <p>판결의 법적 구속력 有 but 강제집행권 無</p> <p>판결 불이행시 안보리의 적절한 이행조치 可</p>

정답은 4번입니다.

20. 정답은 5번이죠

	지역구			비례대표		총의석수	총의석률
	득표율	의석률	의석수	득표율/의석율			
A당	50%	45	90	33		123	41%
B당	15%	20	40	26		66	22%
C당	25%	20	40	35		75	25%
D당	10%	15	30	6		36	12%

* 의석율 > 득표율 : 과대대표

공유&재배포 자유로우나,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세요.

2020 리갈 마인드 랩스.